

2021 WEEKLY CLIMATE REPORT

탄소중립&기후변화 국제동향



12월 첫째 주 주요 동향

- 01 (세계) 탄소중립 선언한 74개국의 목표 달성 방안 분석 (11.18.)
- 02 (독일) 독일 2021 연정 합의문의 기후·에너지 부문 (11.25.)
- 03 (독일) 원자력 폐쇄는 전력 부족을 초래하지 않을 것 (11.24.)
- 04 (미국) 2.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·기후변화 법안 하원 통과 (11.21.)
- 05 (미국) 백악관, 과학기술정책국 산하 새 에너지부서 출범 (11.24.)
- 06 (아세안) ASEAN,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친환경분류법 발표 (11.24.)
- 07 (세계) IMO MEPC 회의에서의 감축 계획 지연 (11.24.)

01

(세계) 탄소 중립 선언한 74개국의 목표 달성 방안 분석¹⁾ (11.18.)

- 세계자원연구소(WRI)는 COP26 폐회까지 탄소중립을 약속한 74개국 목표 이행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
- 74개국 중 대부분 국가가 탄소중립 목표 연도를 '50년 또는 그 이전으로 선언
 - 러시아와 같이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초기 감축 성과를 통해 전 세계에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
 - 인도네시아, 멕시코, 남아공 등 다 배출 국가의 탄소중립 동참 필요
- 탄소중립 목표 분야로 대부분의 산업이 포함되어 있지만, UNFCCC가 인정하는 모든 온실가스* 및 국제 해운·항공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외한 국가가 다수
 - * 이산화탄소(CO₂), 메탄(CH₄), 이산화질소(N₂O), 과불화탄소(PFCs), 수소불화탄소(HFCs), 육불화황(SF₆)
 - 에너지, 산업, 농업, 폐기물, 토지이용,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(LULUCF) 등 국내 대부분 분야의 탈탄소화를 목표
 - 국제 해운·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국경을 벗어난다는 이유로 국가별 배출량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 있어 국제 해운·항공 부문의 배출량을 명확히 할 방안이 필요
 - 74개국 중 31개 국가(43%)가 UNFCCC에서 인정하는 6가지 온실가스* 전부를 감축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, 뉴질랜드, 우크라이나 등 국가는 특정 온실가스(예 : 유기물에 의해 발생하는 메탄) 제외
- 목표 연도 안의 실제 배출량 감축 목표를 별개로 설정한 국가는 5개국에 불과
 - 많은 국가들이 탄소흡수원이나 공기 중 탄소 포집과 같은 기술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설정
 - 실질적인 탄소배출 감축 이외의 자연적·기술적 감축을 배출 감소량으로 반영하기에 감축 규모와 가용성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음
 -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실제 감축량과 자연적·기술적 감축 전략을 통한 감축량을 구분하여야 함
 - 스웨덴이 좋은 예로 '45년까지 '90년 대비 최소 85% 감축을 목표로 하며 나머지 감축분은 같은 연도 이내에 탄소중립을 위한 추가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국외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국내 감축분을 상쇄하지 않는 국가는 오직 10개국 뿐
 - 국제적인 탄소감축 상쇄분 구매에 과도한 의존을 지양하고 국내 배출량 감축 및 제거로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
 - 하지만, 저개발국은 국제적 지원 없이 국내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고 국내 감축의 보조 수단 및 개도국 기후 대응 지원 약속 이행을 위해서 국내외 자연기반 기후해법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필요함
- 다수의 국가가 탄소중립을 위한 단기적 계획에 집중되어 있음

1) World Resource Institute, How National Net-Zero Targets Stack Up After the COP26 Climate Summit(11.18)

- 3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적인 탄소중립 계획과 단기적 감축 목표의 연계 필요
- 영국, 프랑스, 뉴질랜드 등 '탄소 예산' 제정으로 중단기 감축 목표 설정
- NDC와 탄소중립 계획의 통합을 통해 NDC내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함으로써 장기 탄소중립 목표를 보장할 수 있음

02

(독일) 독일 2021 연정 합의문의 기후·에너지 부문²⁾³⁾ (11.25.)

- 독일 총리지명자인 사회민주당 대표 올라프 숄츠, 3당(사회민주당, 녹색당, 자유민주당) 연정을 발표하면서 향후 4년 동안의 정책 지침이 될 연정 조약 합의문 공개
 -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당뿐 아니라 친기업적 성향의 자유민주당도 총선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정책을 지지했기 때문에 연정 합의문에는 기후 위기 대응 관련 주요 내용이 그대로 포함
 - 서문 포함 9개 목차 중 3번째에 '사회 생태학적 시장 경제에서의 기후 보호'를 기재하고 5개 하위 항목*으로 세분화하여 방향을 제시
 - * ① 산업, ② 환경과 자연 보호, ③ 농업과 식품, ④ 교통, ⑤ 기후·에너지 변화
 - 3당은 연정 합의문에서 독일을 1.5°C 달성 경로에 올리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
- 에너지 부문 탈탄소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확대하고 수소의 사용 확대
 - '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증가시켜 전체 전력 생산의 80%(680~750 TWh)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*로 하며, 이에 다른 환경 보호 영역보다 우선순위를 부여함
 - * '30년까지 해상 풍력 30 GW, 태양광 발전 200 GW, 수소 전기분해 10 GW 발전
 - 육상 풍력 발전을 위해 독일 국토의 2%를 사용할 계획이며, '22년 상반기에 육상 풍력 발전 용지에 대한 포괄적인 작업을 시작할 것
 - 녹색 수소 생산을 지원하고 시장 개발을 위해 공공 조달에 녹색 수소 할당량 도입
 - '22년 신규 전력 시장 설계를 위해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고, '23년 중반까지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
 - 재생에너지법(EEG, Erneuerbare Energien Gesetz), 장기전력구매계약(PPA, Power Purchase Agreements)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용량을 대규모로 확장하고, 탈석탄이 완료되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예정
- 기존 탈석탄 정책을 강화해 전력에서의 탈석탄을 더 빠른 기간에 달성한다는 목표
 - '38년까지 탈석탄을 달성을 달성하겠다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강화해 '30년까지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
 - 유럽 ETS 가격이 €60/t 미만으로 하락하면 독일 정부는 가격 하한선(예: €60 이상)을 설정

2) Clean Energy Wire, Next German government's key climate and energy plans in 2021 coalition treaty(11.25)

3) Clean Energy Wire, The carbon balancing act: Emission reduction and removal in the bid for net-zero(9.23)

- 기존 에너지원이었던 석탄과 원자력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도기 동안 천연가스 발전이 필요하기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가스 화력발전소의 건설이 필요
 - 기존 탄광 지역의 전환을 위한 지원, 석탄 화력 발전의 해체와 재생을 위한 재단·회사의 설립 검토
- 탄소 가격은 산업과 가정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
- 산업,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'23년 1월부터 재생에너지로 인한 할증 요금은 전력 가격이 아닌 연방 예산과 에너지, 난방 및 운송에 대한 탄소 가격 수입에서 지급될 것
 -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지원으로 탄소 가격을 지원할 것이고, 사회적인 이유로 에너지에 대한 탄소 가격 인상은 없을 것
 - '26년 이후에 소비자를 위한 탄소 가격 사회적 보상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
-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 행동법 및 EU 압박
- '22년 연방 기후 행동법 개혁 및 기후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 프로그램 구현
 - 전체 배출량의 5%를 차지하는 실제 감축 불가능한 탄소 6,300만 톤* 제거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 개발
 - * 가축 사육, 비료 사용 시 발생하는 메탄,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 등
 - EU 전체 탄소 가격 하한선과 건물 및 운송 부문 탄소 가격 설정 추진
 - '30년까지 유럽연합이 녹색 수소 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맞춰 국가의 수소 계획도 업데이트한다는 방침
- 산업이 기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을 개발
- EU의 CBAM 도입을 지원하고 산업이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탄소 차액 지원제도* 등 개발
 - * 탈탄소 기술을 적용해 제품을 생산하면 생산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
 - 독일이 EU 내 배터리 셀 연구, 생산 및 재활용의 중심지가 되도록 전략 개발
 - 탄소누출* 방지 산업 전략 및 경쟁력 있는 전기 가격의 보장 등의 전략 개발
 - * 기후 위기 대응 비용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자가 배출 규제가 느슨한 관할 구역으로 이동하는 현상
- 수송, 난방 및 건물 부문에서 전력,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
- '30년까지 최소 1,500만 대의 전기 자동차 도입을 목표로 충전 인프라의 구축을 가속하고 자동차 산업의 전략 플랫폼 구축
 - '25년에 신축건물은 기준 건물(Reference building) 에너지 소비량의 40%를 소비하도록 규제
 - 난방 부문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'25년에 모든 신규 난방은 재생에너지를 65% 사용 및 '30년까지 기후 중립 난방 비율 50%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
- 탄소 흡수원의 보호와 농업에서의 기후 대응 전략
- 국가의 황무지, 산림, 토양을 보호하고 그에 따른 보호 전략과 모니터링 센터 등 설립
 - 동물 복지를 고려해 가축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및 메탄 배출을 감축하고, 기후중립 축산으로의 전환을 위한 농민 지원

- 기후 행동, 환경 보호 및 농민 소득 보장을 위해 CAP 전략*에 수반되는 규정을 변경하고 CAP 자금 조달 구조 검토

* CAP(Common Agricultural Policy): 공동 농업 정책으로 농가 직접 지급 제도, 농촌개발정책, 농산물 가격지지 제도 등을 담고 있음

- 바다 숲, 바다초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의 탄소 저장 용량 개선

03

(독일) 원자력 폐쇄는 전력 부족을 초래하지 않을 것⁴⁾⁵⁾⁶⁾⁷⁾ (11.24.)

- 독일경제연구소(DIW Berlin,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)에 따르면 독일의 원자력 발전소 폐쇄가 전력 공급 부족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 발표
 - 전력 시장 모델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소 Brokdorf, Grohnde 및 Gundremmingen C와 Neckarwestheim 2, Isar 2 및 Emsland의 폐쇄가 전력흐름과 에너지믹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
 - * 전기요금 전망, 수익성 분석을 통해서 발전, CO₂ 및 온실가스 배출, 수출 균형, 발전소 차량, 재생 에너지의 확장 및 시장 통합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모델링
 - 원자력의 감소가 일시적으로 화석연료의 더 많은 사용과 수입으로 이어질 것이지만, 재생 에너지의 빠른 확장 때문에 향후 화석연료 사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
- 독일에서는 환경을 중시하는 신호등 연합(traffic light coalition)^{*}이 형성되면서 국가 재생에너지 확장의 진전이 느려짐과 동시에 다가오는 원자력 발전의 단계적 중단으로 인해 전력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존재
 - * 독일 사회민주당(SPD), 자유민주당(FDP) 및 녹색당의 연립 정부
- 독일의 청정에너지 사용은 '30년까지 100 TWh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, 차기 정부는 '30년까지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'40년에는 가스를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
 - 독일 언론사 FAZ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재생에너지 계획 및 허가 과정을 가속화 및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의무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독일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할 것
 - 독일 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, 차기 독일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전력 비중을 현재 목표인 65%에서 '30년까지 80%로 높일 수 있음
- 독일 연방 에너지부(BMWi,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)예측에 따르면 독일의 '30년 에너지 수요는 645~665 TWh 사이이며,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연간 516 TWh 이상 또는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의 두 배 이상^{*}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

4) Euractiv, German nuclear power shutdown will not lead to power shortage: report(11.24.)

5) Diw Berlin, The shutdown of the last nuclear power plants in Germany does not leave a supply gap(11.24)

6) S&P Global, German coalition plans for 480-540 TWh renewables by 2030 to exit coal(11.25)

7) Clean Energy Wire, German 2030 power use forecast up due to heat pumps, e-cars and hydrogen(07.13)

* 20년 재생에너지 소비량은 251 TWh

- 또한, 그리드 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혼잡한 관리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
- 보고서의 주 저자 Claudia Kemfert, 원전 폐쇄는 재생에너지 확장을 위한 길을 제시하며 원전은 시작부터 비경제적이었으며 계산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

04

(미국) 2.2조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·기후변화 법안 하원 통과⁸⁾ (11.21.)

- 바이든 美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2조 2,000억 달러(약 2,380조 원) 규모의 사회복지·기후변화 예산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
 - 보육·교육·의료·주거 등 사회복지 지원 확대 정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이 '위대한 재건법(Build Back Better Act)'으로 발의
 - 기존 미국 가족계획(American Families Plan)으로 발표된 3.5조 달러 규모 예산안이 야당 및 당내 반대로 대규모 축소
-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사상 최대 기후 관련 예산 편성
 - 5,550억 달러의 기후변화 프로그램 예산은 예산안 중 가장 큰 지출 항목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후변화 대응 대응법이 될 전망
 -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빌딩, 교통, 산업, 전력, 농업 등의 분야에 투자하고 풍력, 태양광, 원자력 등 저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산업 투자 확대 추진
 - 화석연료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풍력, 태양광, 원자력 생산업체와 구매자들에 제공할 약 3,200억 달러 규모의 세금 혜택도 새로운 기후예산의 주요 부분
 -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12,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 부여와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10억 달러, 전력망 구축에 29억 달러 배정
 - 기후예산 중 500억 달러는 강우량을 견디기 위한 도로 교체, 산불을 막기 위한 산림 처리, 저수지 강화, 재식림 작업에 쓰일 예정

05

(미국) 백악관, 과학기술정책국 산하 새 에너지부서 출범⁹⁾ (11.24.)

- 바이든 행정부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(OSTP,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)에 에너지 관계 부서를 신설, 기후 관련 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할 전망

8) NYT, What's in the \$2.2 Trillion Social Policy and Climate Bill(11.21)

9) Washington Post, White House creates new energy division to help craft climate change policies(11.24)

- 기후 관련 정책을 조율할 책임자로는 스탠퍼드대학 에너지 공학 교수인 Sally Benson을 임명
 - 고유가를 이유로 공화당의 공격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정책의 추진을 가속하기 위한 목적
- 미국 내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와 기존 산업 판도에 변화가 예상
- 미국은 '35년까지 전면적인 청정에너지 도입 및 '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어 미국 내 산업과 교통 체계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
 - 가정, 회사, 공장, 자동차 부문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예상
 - 신설될 에너지부 책임자 Sally Benson 교수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“청정에너지 경제로 신속한 전환을 통해 모든 미국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” 및 “120년 가까이 된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의 조속한 전환은 미국 내 산업 및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기회로 작용할 것”이라고 발언
- 야당인 공화당과 보수 성향의 인사들은 비난의 목소리
- 연방 소유 공유지에서의 석유·가스 시추 금지령과 고유가 억제를 위한 전략 비축유 5,000만 배럴의 방출은 기후정책과 모순이라고 공화당은 비판
 -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부소장 James Carafano, 정책 의사결정에 관여할 관료주의 층이 하나 더 생기게 될 것이라며 비난
- 기후 분야의 영향력 있는 인사를 영입해 적극적인 기후 관련 정책 추진
- 카네기멜론대학의 토목 환경학 부교수로 청정에너지 이용 현황 파악을 맡았던 Costa Samaras를 에너지 담당 수석 부국장에 임명
 - 백악관은 배출가스 없는 미래의 실현과 미 전역 모든 국민에게 가장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청정전기를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 발표
 - 에너지부서의 신설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.2조 달러 규모 인프라 법(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)의 에너지 부문 이행에 기여할 전망

06

(ASEAN) ASEAN,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친환경분류법 발표¹⁰⁾ (11.24.)

-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하며 공적 자원만으로는 목표 달성 불가능
- 이에 기관·민간의 투자 동원을 위해 ‘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’에 관한 정의 및 판단 기준을 담은 분류체계(Taxonomy) 필요

10) Lexology, ASEAN Releases Sustainability Taxonomy for Southeast Asia(11.24.)

- 기후 투자자와 금융권을 대상으로 EU Taxonomy, 기후채권이니셔티브(CBI)의 기후채권 taxonomy, 국제표준기구(ISO)의 녹색 용자 taxonomy 등 既 발표
 - 국제적 분류체계와의 조화를 유지하며 각국의 여건과 역량을 감안한 국가 단위의 분류체계 필요
- 이에 ASEAN은 지속 가능 금융을 위한 친환경 분류법(ASEAN Taxonomy)의 초안 발표(11.10.)
- ASEAN Taxonomy는 향후 ASEAN 국가들에 대해 지속가능한 공통 기준(A common language)을 제공할 예정
 - 발표된 초안은 ASEAN Taxonomy가 발전함에 따라 아세안 국가 간의 지속적인 논의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에 중요하다고 여겨짐
- 시행 원칙(Guiding Principles)
- ASEAN Taxonomy는 다음 5가지 주요 원칙*에 의해 시행
 - * ① 공통 언어를 제공하며, 개별 국가의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를 보완
 - ② 널리 사용되는 분류법들과 다른 관련 분류법들을 고려할 것이며, 지속가능한 ASEAN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조정
 - ③ ASEAN 분류법은 모든 ASEAN 회원국에 포괄적이고 유익해야 함
 - ④ ASEAN 분류법은 정의를 포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해야 하며, 적절한 경우 과학에 기반하여야 함
 - ⑤ ASEAN 분류법은 자본 시장, 보험 분야, 금융에 의한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와 일치해야 하며 상호 대립하지 않아야 함
- 구조(Structure)
- ASEAN Taxonomy는 10개 회원국*들의 경제, 다양한 개발 상태, 기타 상황들을 반영하도록 단계별 접근방식을 통해 통합할 예정
 - * 브루나이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필리핀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
 - ASEAN Taxonomy에서 산업 개발은 ASEAN 국가들이 환경적인 문제 및 도전에 직면하게 했으며, ASEAN 국가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들의 기여자이자 피해자임을 밝힘
 - 증가하는 환경 문제들은 사업 모델을 포함한 근본적인 전환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분류법 개발을 위한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요구
 - ASEAN Taxonomy는 해당 국가들에 적용될 공통적인 기반 프레임워크(Foundation Framework)를 포함하는 반면, 차별적인 추가 기준(Plus Standard)은 ASEAN 국가들에게 녹색 활동과 투자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고 벤치 마크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지침과 범위를 제공
- 기반 프레임워크(Foundation Framework)
- 기반 프레임워크에 따라, 경제 활동들을 수행할 때 잠재적으로 “지속가능한(sustainable)”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환경 목표 4가지*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함

- * ① 기후변화 완화, ② 기후변화 적응, ③ 건강한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보호, ④ 자원 회복력 및 순환 경제 전환 촉진

- 또한, 모든 활동은 두 가지 필수 기준*을 충족해야 함

- * ① 활동은 어떠한 환경적 목적과 노력을 훼손하지 않아야 함
- ②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완화해야 함

- 모든 활동은 지역 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ASEAN 국가들에 의해 연구된 환경법에 따라 평가받아야 함

- 경제활동은 각 환경적인 목적에 따라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하는 의사결정트리(Decision Tree)에 기반하여 녹색, 황색, 적색으로 분류*

- * ① 녹색 : 기후변화 완화를 가능하게 하거나 기여하는 활동
- ② 황색 :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이외의 활동 중 탈탄소화에 기여하는 활동
- ③ 적색 : 기후변화 완화가 불가능하거나 다른 안전조치 충족에 실패한 활동

○ 추가 기준(Plus Standard)

- 구체적인 경제 활동*들에 대해서 부가적이고 세분화된 기술적인 감시 기준을 제공

- * ① 농업, 임업 및 어업, ② 제조, ③ 전기, 가스 증기, 냉난방 공급(air conditioning supply)
- ④ 운송 및 보관, ⑤ 건설 및 부동산 활동, ⑥ 수도공급, 배수처리, 폐기물 관리 및 정화 활동

- 추가 기준은 녹색, 황색, 적색으로 분류된 활동들을 결정하기 위해 경제 활동들에 대한 단계적 기준을 제시

- 또한, 추가 기준은 타 분야들이 환경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인 ‘활성화 부문(enabling sectors)’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데, 그 예로서 정보 통신 부문이 있으며, 정보 통신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데이터 센터와 같은 물리적 인프라와 혁신적인 데이터 기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 기후변화 완화를 가능하게 하는 부문으로 식별됨

○ EU Taxonomy와의 일치 여부(Alignment)

- ASEAN Taxonomy와 EU Taxonomy를 비교해봤을 때 초안에서 주요 2가지 특이 사항 관찰

- 주요 일치 사항 : ASEAN 분류법은 4가지의 주요 환경 목표들을 규정하며, EU는 6가지 목표를 규정*

- * 구체적으로 ASEAN 분류법은 EU로부터 4개의 구체적 목적을 차용해서 2개의 광범위한 목적으로 그룹화했으며 EU 분류법은 목표 3번(물과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보호)과 목표 6번(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의 회복과 보호) 목표들은 한 가지의 ASEAN 목표(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복원)에 반영됨. 또한, EU 분류법 목표 4번(순환 경제 전환)과 목표 5번(오염 방지 및 통제)은 ASEAN의 자원 회복력 및 순환 경제 전환 촉진 목표에 반영됨

- ASEAN의 최소 안전조치(ASEAN Minimum Safeguards)는 환경친화적 : EU Taxonomy에서 경제 활동은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최소 안전조치*(minimum safeguard)를 충족해야 함

* EU 분류법 18조에 따르면, 해당 내용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, 기업과 인권에 대한 UN 이행 원칙, ILO 주요 협약, UN 국제 인권 장전을 요구함. 그러나 ASEAN 분류법에서는 미 존재

○ 미래 개발(Future Developments)

- ASEAN Taxonomy 초안은 진행 중인 발전의 기반이 됨을 명시
- 시장 참여자들은 피드백 반영 및 기술적인 심사 기준이 향상됨으로써 프레임워크가 발전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음
- 또한, ASEAN Taxonomy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국가 Taxonomy, 중국과 EU가 개발 중인 공통 기반 Taxonomy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며, 산업 및 정부 기관이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

07

(세계) IMO MEPC 회의에서의 감축 계획 지연¹¹⁾¹²⁾ (11.24.)

- 국제해사기구(IMO,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)가 개최한 해양환경보호위원회(MEPC) 회의에서 IMO와 회원국들의 결정은 ‘위험하다’는 비판을 받음
 - IMO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*은 파리 협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수치보다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며, UN 사무총장 António Guterres도 IMO의 전략을 비판한 바 있음
 - * '50년까지 선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'5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
 - IMO는 이번 MEPC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정하지 않고, 현 전략의 채택을 위하여 '23년까지 기다리기로 결정
- IMO MEPC 의장 Hideaki Saito, 내년에 있을 MEPC 78에 온실가스 감축 전략 수정안을 제출하고, MEPC 80('23년)에는 채택하도록 동의를 구할 수 있음을 언급
 - 유럽 해양 환경 단체 협회(Seas At Risk)의 운송 정책 책임자인 Lucy Gilliam, 배출량을 줄이려면 10년이 필요하며 '30년까지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함을 촉구
 - 해운 환경 연합(Clean Shipping Coalition)회장 John Maggs, 파리 협정 목표인 1.5°C를 고수하려면 당장 배출량 대폭 감소시켜야 한다고 언급
- UN 회원국들은 해운 부문에서 엄격한 배출량 감축에 전념 중
 - COP26에서 다수 국가*는 '50년까지 선박 배출량 순 제로에 도달하기 위해 글로벌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선언문에 서명
 - * 영국, 미국, 프랑스, 독일, 파나마, 마셜 제도 등
 - EU는 '30년까지 Fit for 55에 따라 운송 배출량을 55%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 선박 회사는 EU 항구를 오가며 배출하는 탄소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함

11) The Guardian, UN shipping summit criticised for ‘dangerous’ delay on emissions plan(11.24.)

12) Splash 247, Europe foils zero emissions resolution at MEPC(11.23)

○ MEPC는 COP26을 통하여 증가한 기후 희망을 충족시키지 못함

- 마셜 군도와 솔로몬 군도는 '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결의안을 제안했지만, 소수의 국가만이 결의안 지지*의사를 표명

* 일본, 뉴질랜드, 우크라이나, 영국, 미국, 바누아투 및 아이슬랜드는 지지했지만, EU 27개국, 조지아, 한국, 바하마, 노르웨이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지지하지 않음

- COP26에서 탄소 제로 배출 선적 선언을 지지한 일부 EU 국가*도 MEPC에서의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음

* 벨기에, 핀란드, 덴마크, 프랑스, 독일, 헝가리, 스웨덴 등

- 브라질, 중국, 러시아,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국가에서 '50년 결의안과 '50년 탄소배출 제로 목표에 반대

- IMO 독립 컨설턴트 Edmund Hughes, 야심찬 전략에 대한 합의를 달성하는 것이 IMO와 회원국에게 중요한 첫 단계라고 언급